

○ 기해경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개방화 시대에 수산업이 FTA에 대처하는 법, 국내보완대책의 활용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매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수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FTA 대책 세부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에 있다.



I. 들어가면서

FTA 국내보완대책,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한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왔다.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이하 'FTA 대책')은 한-미 FTA와 한-중 FTA를 계기로 두 차례 수립되었다. 한-미 FTA 대책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 302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한-중 FTA 대책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기존 재정계획(1조 2,622억 원)에 3,188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총 1조 5,81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FTA 대책 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현재 이행 중인 수산분야 FTA 대책은 지원 성격에 따라 크게 '산업경쟁력 강화', '어가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직접피해보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성격별 분류

산업경쟁력 강화	어가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구축	직접피해보전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양식어업 시설현대화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 연안어업인 자조단체육성* 노후어선 부분개량*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친환경 에너지보급* 수산물자조금 지원* 내수면양식 시원* 천일염산업 특화 지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수산물 원산지관리* 수산물이력제*	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업인 복지지원 어촌공동체, 수산종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자원조성사업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해양폐기물 정화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정밀관리*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주1: *는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이며, **는 한-미/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중복 사업임. 표시가 없는 사업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임.

주2: 활어 컨테이너 제작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편입됨

II. 수산분야 FTA 대책

1. 산업경쟁력 강화

1)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기반 확충

정부는 FTA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야별 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양질의 종자 및 양식 생산 기술 개발 지원, 영세어가의 조직화 지원,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있다.

그 중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사업은 물류의 절감과 시장 다변화 등 활 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내 활 수산물의 수출 시장은 일본에 치중되어 있어, 엔저 등 대외여건 악화 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활 수산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다변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항공 수출 시 물류비가 비싸고, 수출 가능 품목이 제한적이며, 대량 운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제어류양식협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1대의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컨테이너의 활 수조는 수산물의 장거리 운송 중에도 해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선적된 활 수산물의 폐사율은 자연 폐사 수준으로 낮다. 협회는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사용으로 항공 운송 대비 물류비용을 절반정도로 낮추었고, 장거리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광어 중심의 활 수산물 수출 품목이 우럭, 참송어, 강도나리, 참돔, 전복, 멍게, 갯굴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회의 활 수산물 수출량은 2011년 6.2톤에서 81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내·외부

2. 어가경영 안정화

1) 어업재해보험 지원 등으로 어가경영안전망 확충

정부는 FTA 등으로 개방화가 지속되는 시대에 수산업 존속을 위해 어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들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안정망 확충, 영세 어가에 영여자금 조달 원활화, 낙후 어촌의 정주여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확대·추진되고 있는 어업재해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적조와 매년 반복되는 태풍, 계절별 고수온과 저수온, 질병 등이 늘면서 양식어가의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수산물은 피해액의 85~90% 까지, 시설물 피해는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전액을 보상해 준다.



[그림 2]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 물고기의 때죽음 피해

출처 : <http://www.ohmynews.com>

사업 초기에는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도 피해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급 거부당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어업인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야기한 양식장의 피해 이후 보험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이 달라졌다. 당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의 90% 이상을 보전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해



보험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이를 계기로 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여, 다수의 어업인들이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어업재해보험은 2008년 광어를 시작으로 도입되어 빠른 속도로 품목이 늘고 있다. 한-중 FTA 대책 수립에 앞서 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상 품목 수가 2017년 총 27개로 확대되었다.

3.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1) 자율적인 지원관리 장려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 장려, 연근해 특정 해역 수산자원 조사, 불법어업 단속, 기존 환경오염 유발물질인 어구 및 사료 대체 사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분야의 대표적인 세부 사업은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제고

어업인의 경쟁적 조업은 자원남획으로 이어져 어장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어업인이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도록 장려했다. 자원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규약을 정하게 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주도의 자원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 거제시 유흥리에 위치한 자율관리공동체인 유흥어촌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흥어촌계는 지리적 특성상

농업이 불가능하여, 소득원이 수산업에 한정되어 주민들의 개인 이익 추구로 인한 자원고갈, 주민간의 갈등 심화,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율관리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생산량과 공동체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유호어촌계는 현행 법령과 별도로 지역 주요 수산물에 대해 포획 사이즈 제한, 생산량 제한, 금어기 규정 등을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전복, 해삼, 피조개, 문어의 경우 각각 10cm, 10cm, 8cm, 350g 이하 크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복, 바지락, 문어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5톤, 25톤, 10톤 이하로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문어와 해삼은 하절기 2개월간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해안가 및 어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어장정소를 하고 있다.

유호어촌계는 철저한 자원관리와 어장환경 개선 활동으로 2007년부터 5회에 걸쳐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어촌계는 육성사업비로 종묘방류, 어업인 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였다. 자율관리공동체로서 자율관리위원 간담회(매월 2회), 정기총회(연 2회), 우수공동체 견학(연2회 이상)을 추진함에 따라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 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 어촌계는 자체적 펜션사업을 운영하는 등 어업 외 소득 또한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림 3] 유호어촌계 우수공동체 견학(제주)



[그림 4] 유호어촌계 간담회 전경

4.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등 FTA로 인한 직접 피해 보전



정부는 FTA 이행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급격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하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함께 초기 투자비용이 크며 FTA 이행으로 어업 지속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하는 폐업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동 제도도입 이후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없었으나, 2015년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생산자에게 72억원, 2016년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생산자에게 17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한-중 FTA 비준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피해보전 직불금의 피해보전비율을 상향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연장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한 수입 증가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들은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큰 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Ⅲ. 맺음말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매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수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FTA 대책 세부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에 있다. 향후에도 국내 수산업 분야가 FTA 국내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FTA 국내보완대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ffa.kmi.re.kr)에서 관련 세부내용을 제공하고 있다.